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정책 대응*

윤 중 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이 승 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서기관)

< 요약 >

작년 4/4분기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동절기 한파,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집중되어 나타남에 따라 금년 들어 4%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물가불안은 공급측면의 불안요인에 주로 기인되었으나,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물가여건을 보면 시장 경쟁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물가가 하방경직적이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후진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물가정책은 물가불안의 원인과 성격, 향후 물가여건,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물가상황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틀 속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 물가상승은 불안요인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물가충격에 대한 경제의 조정과정에서 경제주체가 과민반응하고 인플레이심리가 확산될 경우 “고물가”의 나쁜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경제의 안정기반을 저해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1.13일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의 물가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한편 미시적으로는 수급 안정 등 단기대응과 함께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과점 시장구

* 본 원고는 2011년도 한국경제학회 주최 제1차 정책세미나(2011. 3. 10(목),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오르는 물가, 향후 전망과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본 논문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서 기획재정부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로 인한 경쟁 제한, 가격의 하방경직성, 정보의 비대칭성문제 등 시장의 불안전성을 시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인플레이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와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물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기대한다.

1. 머리말

농산물 작황부진으로 2010년 4/4분기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동절기 한파, 구제역, 국제 유가 상승 등 물가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집중되어 나타남에 따라 금년 들어 상승률이 4%를 상회하고 있다. 물가가 신선식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물가불안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가운데 서민 생계비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물가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확산될 경우 경제의 안정기반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의 물가불안은 농축수산물 공급부족,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부문의 물가충격에 주로 기인된 것이나,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장 구조적으로도 경쟁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물가가 하방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등 물가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은 물가불안의 성격, 향후 물가여건,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물가상황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틀 속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불안요인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우리 경제가 물가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물가충격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경제주체가 과민반응하고 인플레이심리가 흔들릴 경우 경제가 “고물가”의 나쁜 균형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물가안정”의 좋은 균형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1.13일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상반기 물가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는 한편, 일시적 물가 불안요인이 구조적 인플레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한편, 미시적으로는 수급 안정과 공공요금 안정, 불공정거래 시정 등 단기대책과 함께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독과점 시장 구조로 인한 경쟁 제한, 가격의 하방경직성,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 시장의 불안전성을 시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인플레이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신뢰를 축적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시장 왜곡을 야기할 소지를 최소화해야 하며, 아울러 유가 등 상대가격 변화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도 유도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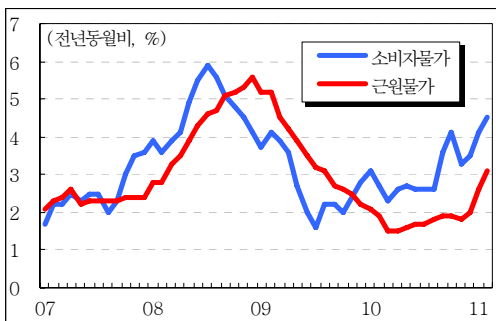
아래에서는 우선 최근의 물가동향과 상승원인 및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여건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대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기술한 후, 물가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2.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

1) 최근 물가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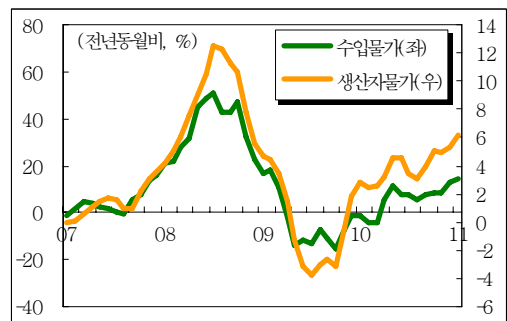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2008년 크게 상승했던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고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2009년 이후 3% 내외의 상승률을 나타내어 왔다. 그러나 작년 4/4분기 이후 농산물 공급부진으로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겨울 한파와 구제역 확산,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1) 소비자물가는 1월에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한 데 이어, 2월에는 4.5% 상승하였고, 특히 신선식품 물가가 25.2% 상승하면서 서민 생계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¹⁾ 농산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이 있는 부문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3.1% 상승하였다.(그림 1)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도 지난해 3월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그림 1>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동향



* 출처: 통계청 KOSIS DB.

<그림 2>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동향



* 출처: 한은 ECOS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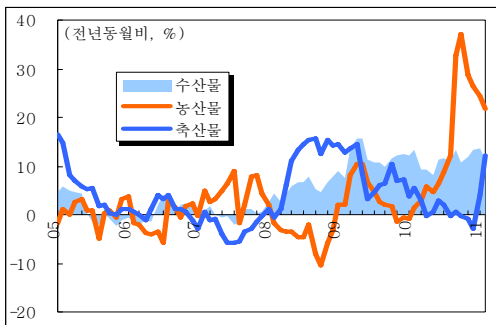
최근의 물가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 2010년 기상악화로 인한 수급차질이 지속되면서 20%가 넘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사육두수 증가 등에 힘입어 안정

1) 신선식품은 생선, 채소, 과일과 같이 신선도,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품목을 중심으로 통계청에서 산정하는 보조적 물가지표로서 전체 소비자물가 품목의 4.3%를 차지한다.

세를 보였던 축산물 가격도 구제역에 따른 공급 축소, 대체소비 증가 등으로 금년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다.²⁾(그림 3) 수산물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저하, 어획쿼터 축소 등으로 2009년 이후 10% 내외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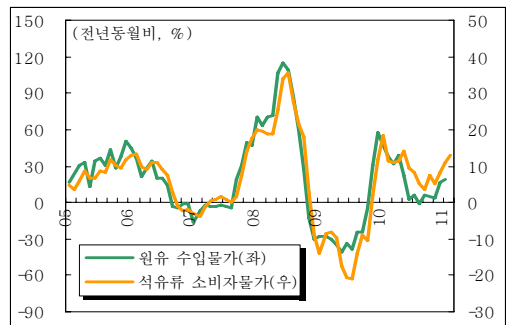
공산품의 경우, 우선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유가가 한파로 인한 수요증가,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 등으로 최근 크게 오르면서 2010년 4/4분기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그림 4)

〈그림 3〉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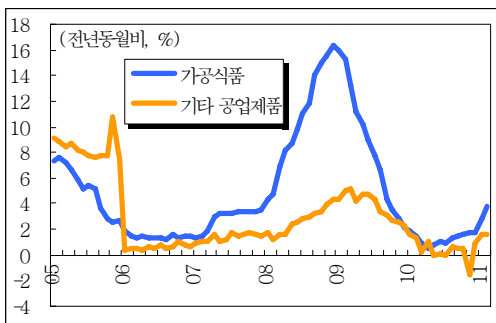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KOSIS DB.

〈그림 4〉 원유 및 석유류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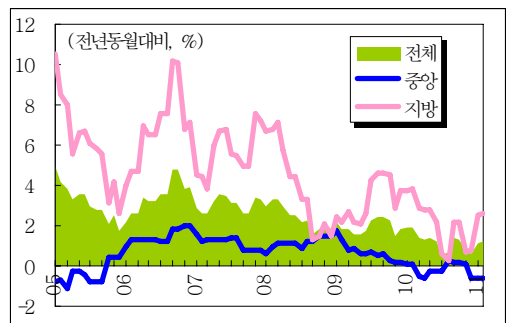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KOSIS DB, 한은 ECOS DB.

〈그림 5〉 공업제품 가격 동향



* 출처: 통계청 KOSIS DB.

〈그림 6〉 공공요금 동향



* 출처: 통계청 KOSIS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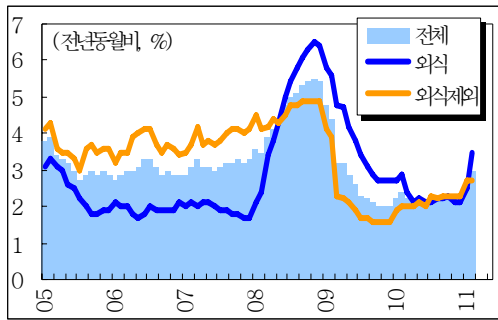
가공식품 가격은 국제곡물 및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최근 상승폭이 커지고 있으나, 2008~2009년에 비해서는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은 편이

2) 구제역으로 2011.3.8일 현재 소 150,871두(전체의 4.5%), 돼지 3,311,968두(전체의 33.5%) 등을 매몰 처분하였다.

다.(그림 5) 기타 공업제품 가격은 그간 중국산 수입 확대 등에 힘입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2%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5) 공공요금의 경우, 2008년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노력이 강화되면서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중앙공공요금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공공요금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최근 일부 지자체의 가격인상으로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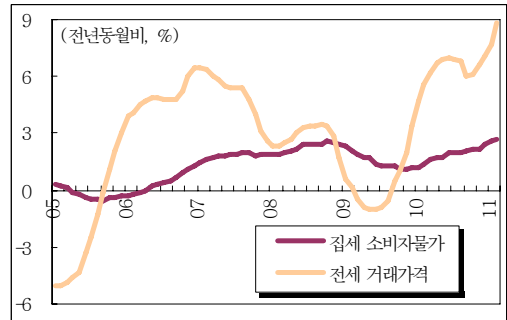
개인서비스 요금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식요금의 경우 재료비 부담등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여타 개인서비스 요금도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다.(그림 7) 2009년에 걸쳐 하락세를 나타냈던 집세는 2010년 이후 전세가격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8)

〈그림 7〉 개인서비스요금 동향



* 출처: 통계청 KOSIS DB.

〈그림 8〉 집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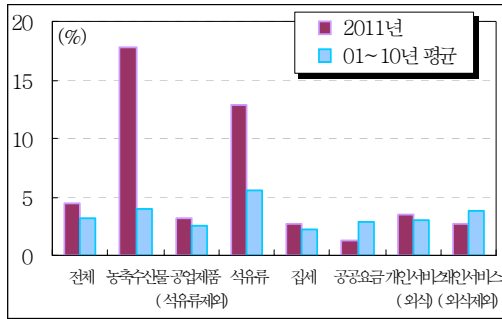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KOSIS DB, 국민은행 주택가격통계.

2) 물가 상승요인

최근의 물가상승은 공급측면의 불안요인에 주로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나 경기회복 등에 따른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급측면에서 보면, 농축수산물의 공급 차질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0년 채소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4.6% 축소된 가운데 한파 등 기상악화까지 겹치면서 농산물의 수급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구제역 여파로 축산물의 공급도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그 결과 2011년 2월 현재 농축수산물 가격은 17.7%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1.6%p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그림 9, 10)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도 급등하였다.(그림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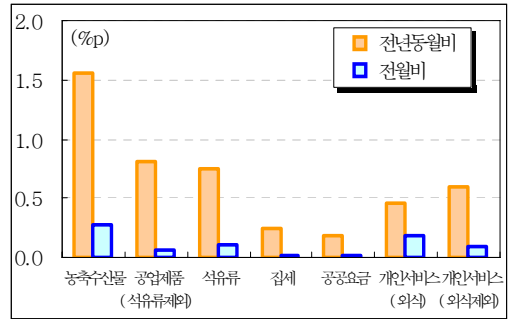
수요측면에서도 물가압력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유동성수준도 풍부한 상황이라 공급측면의 물가불안요인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간접적 효과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그림 13) 근원물가나 외식비 등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이러한 수요압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14)

<그림 9> 2월 품목별 가격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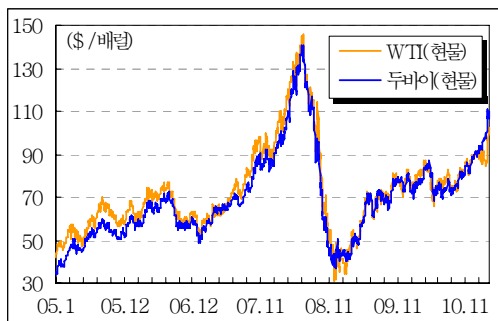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KOSIS DB.

<그림 10> 2011.2월 물가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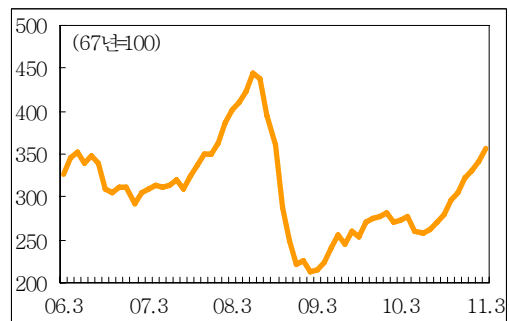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KOSIS DB.

<그림 11>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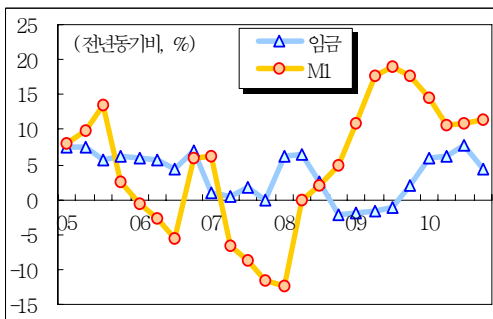
* 출처: 석유공사 Petronet DB.

<그림 12> CRB 원자재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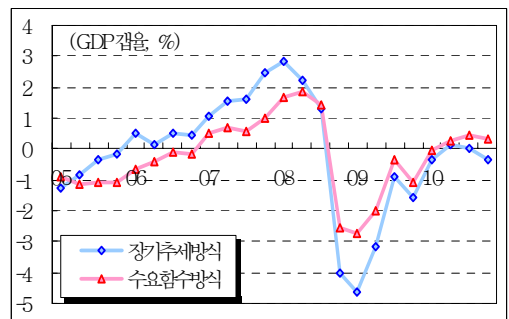
* 출처: Korea PDS DB.

<그림 13> 임금 및 유동성 추이



* 출처: 고용부 노동통계 DB, 한은 ECOS DB.

<그림 14> 총수요 갭 추이



* 출처: 기획재정부.

기상악화와 원자재·식품물가 상승 등에 따른 최근의 물가불안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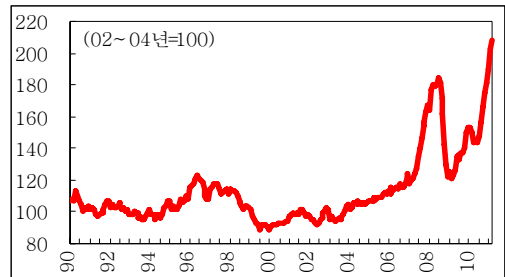
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중국(2011.1월 4.9%), 인도(1월 9.3%), 영국(1월 4.0%) 등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졌으며, IMF는 신흥국, 선진국 모두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다.(표 1) 세계식품가격(UN FAO 식량지수)도 2011년 들어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그림 15)

<표 1> 물가상승률 전망(2010.10→2011.1월)

	2011년 전망(%)		
	당초 (A)	변경후 (B)	차이 (B-A, %p)
선진국	1.3	1.6	+0.3
신흥국	5.2	6.0	+0.8

* 출처: IMF WEO Update(2011.1월).

<그림 15> UN FAO Food Price Index



* 출처: UN FAO DB.

3) 향후 전망

향후 물가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의 물가여건은 대체로 2/4분기 이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 등 불안요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체감물가 불안을 야기했던 농축수산물의 공급부족 문제는 앞으로 농산물 작황이 개선되고 구제역 문제가 마무리될 경우 점차 정상화될 전망이며, 그 결과 관련 물가가 안정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류제품의 경우 동절기수요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동사태의 진전추이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제곡물과 원자재가격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신흥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당분간 강세가 예상된다.(그림 12)

수요측면의 경우 국내 경기의 회복속도에 따라서는 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교역조건 악화 등을 감안할 때 총수요압력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세계경기의 빠른 회복세 시현 소지, 중국 물가불안 등에 따라 해외부문의 인플레이가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가격에 반영되는 점,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필요성 등도 향후 물가관리의 부담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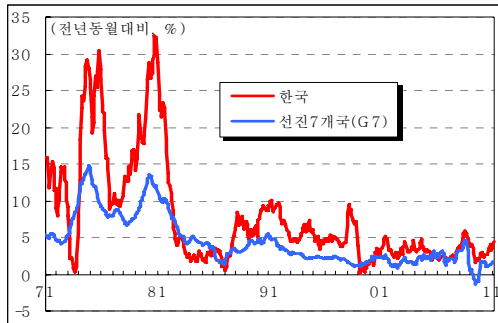
3.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

1) 중장기 물가 추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1970년대 경제개발 이후 시대별 여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높은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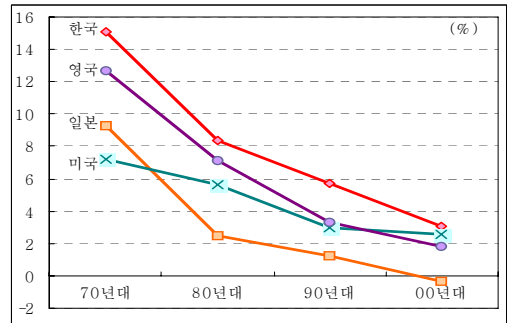
성을 나타냈으나, 점차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과 통화증가율, 석유 과동 등으로 1970년대에 10%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을 경험한 이후 1980년대초 경제 안정화정책의 추진과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졌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 내외의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되었다.(그림 16)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성장속도 및 통화증가율의 둔화와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세계화 진전에 따른 경쟁 확대, 노사관계 개선에 따른 단위 노동비용의 안정 등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된다.³⁾ 이에 따라 1970년대 10%p 내외까지 벌어졌던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물가상승률 격차도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평균 1%p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과의 물가상승률 격차 해소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그림 16, 17)

〈그림 16〉 소비자물가 추이



* 출처: OECD.Stat DB.

〈그림 17〉 주요국의 연대별 소비자물가 추이



* 출처: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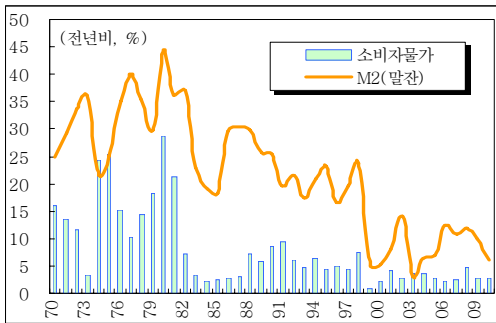
2) 높은 물가상승 기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은 요인으로선 우선 선진국에 비해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형성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통화증가율이 높게 유지되고 빠른 성장세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기대도 높게 형성되었다.(그림18) 2000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평균 2~3%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5%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⁴⁾

3) 1990년대 이후 국제교역 증대가 중저가제품 수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인하 효과와 함께 경쟁 제고, 경제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Alfaro(2005), Sachsida, Cameiro, and Loureiro(2003)는 개방도가 인플레이션과 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Kamin, Marazzi and Schindler(2004)는 한국, 일본 등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중국 수입비중 확대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Castelnovo(2007), Borio and Filardo(2007)는 최근 세계화 진전으로 교역상대국간 인플레이션 연관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GDP갭의 설명력은 작아지는 반면 해외 GDP갭의 설명력이 커지는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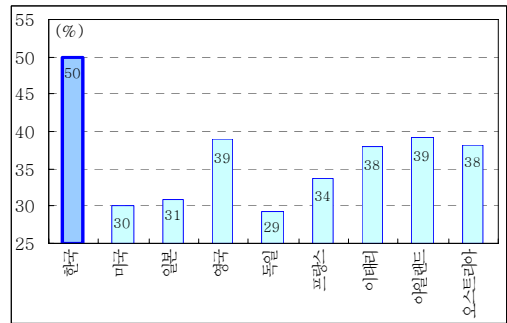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집값 및 교육·식료품비 등이 여타 품목보다 크게 상승한 것도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부문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점도 높은 인플레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⁵⁾(그림 19) 비교역재인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교역재인 제조업에 비해 느리게 개선되는 반면,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상승을 나타내면서 서비스업의 가격이 제조업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Balassa-Samuelson 효과)

〈그림 18〉 연도별 통화량 및 소비자물가 추이



* 출처: 한국은행 ECOS DB, 통계청 KOSIS DB.

〈그림 19〉 서비스부문의 소비자물가 비중⁶⁾



* 출처: OECD.stat DB, 통계청 KOSIS DB.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여타 선진국보다 높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성장과 물가간의 단기적인 상충 관계를 감안할 때 총수요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중기물가목표 수준을 낮춰가는 문제는 경기·고용 및 금융시장

4) 2000년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을 평균(한은, 2010.7월, %): 한국 3.5, 미국 2.2, 유로 2.0, 영국 2.6, 스웨덴 2.1.

5) 소비자물가의 가중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통신·외식부문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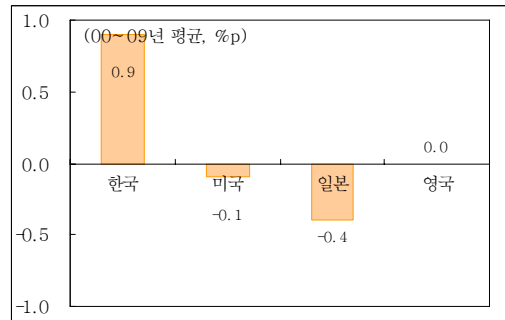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부문별 소비자물가 가중치 비교 (2009년, %)

	식료품	의복	주거/가사	보건	교통	통신	교양/오락	교육	외식/숙박	기타
한국	15.5	5.8	21.2	5.2	10.9	6.0	5.6	11.1	13.3	5.4
미국	9.3	3.7	40.5	5.8	14.2	3.1	7.3	2.7	7.2	6.2
일본	21.0	4.6	30.4	4.5	8.9	3.4	9.8	4.0	6.5	6.9
영국	14.8	5.6	19.3	2.2	16.4	2.5	15.0	1.9	12.6	9.7
독일	14.3	4.9	36.4	4.0	13.2	3.1	11.6	0.7	4.4	7.4
프랑스	18.3	4.9	19.7	10.0	16.3	3.0	9.2	0.2	6.8	11.6

* 출처: OECD.stat DB, 통계청 KOSIS DB.

6) 각국마다 주거비 산정방식에 차이(자가주거비 반영여부)가 있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부문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그림 20〉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추이 〈그림 21〉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 격차



* 출처 : Bloomberg.

8) 한·미·일의 노동생산성 수준(1인당 부가가치,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한 국	15,939	16,250	16,738	16,650	16,577	17,080	17,890	18,933	17,007
일 본	39,965	40,676	41,231	40,990	41,808	42,411	—	—	41,180
미 국	52,941	55,896	56,512	56,296	57,247	59,072	60,782	62,948	57,712

44 한국경제포럼 • 제4집 제1호

효율적인 유통구조와 함께 진입장벽, 높은 관세율 등에 따른 생산·수입시장의 독과점 구조도 시장 지배력을 통한 높은 가격설정 및 초과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과 시장구조가 경직적인 결과 가격을 통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¹⁰⁾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높은 진입장벽 등에 따른 비용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착되고 실질구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유통단계를 줄이고 수입·판매 채널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등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서둘러야 한다.

4) 높은 물가변동성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공급충격에 취약해 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외환위기 이후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표 2)¹¹⁾ 이러한 높은 변동성은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주원인이나, 물가변동 흡수력이 낮은 시장구조에도 기인하고 있다. 높은 에너지 투입비중, 낮은 곡물 자급률 등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수산물 공급 부족 발생시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¹²⁾ 실제 우리나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평 균
소비자물가	△0.031	△0.039	△0.042	△0.044	△0.046	△0.040
생산자물가	△0.018	△0.029	△0.032	△0.035	△0.037	△0.030

* 출처: 유통산업 구조변화와 업체별 핵심이슈(2006.2월, 산업연구원).

- 10) 김정현·이동원(2004, 한은)은 국가별 물가모형을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수항의 기여도(고정효과)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유통구조, 경쟁요소 등 우리나라의 가격결정 구조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이어서 가격의 시장수급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점을 반영한다고 지적하였다.

국가별 물가모형 추정 결과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상수	0.64	0.10	0.16	0.03	0.21
전기변수	0.68	0.92	0.84	0.90	0.75
단위노동비용	0.13	0.03	0.06	0.08	0.13
수입단가	0.02	0.00	0.02	0.01	0.05
GDP갭률	0.07	0.06	0.09	0.07	0.07

- 11) 물가상승률 수준을 고려한 변동계수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선진국과의 변동성 격차는 다소 줄어든다.

소비자물가 변동폭 (변동계수)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변동폭 (변동계수)

	한국	미국	영국	유럽	OECD	1998~2009	한국	미국	영국	유럽	OECD
1990~1997	0.31	0.32	0.60	0.10	0.16	식료품	0.74	0.72	1.26	0.64	0.53
1998~2009	0.53	0.55	0.47	0.46	0.37	에너지	1.58	2.43	1.23	0.95	1.54

* 출처: OECD.stat DB.

* 출처: OECD.stat DB.

- 12)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한국(2008)	일본(2005)	미국(2005)	영국(2005)	프랑스(2005)	독일(2005)	이태리(2005)
28.4	30.7	129.4	100.0	190.6	116.4	82.2

* 출처: 식품수급표 2008 (2009.12월, 농경연).

라의 식료품·에너지가격 변동성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3) 앞으로 기상여건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에너지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를 경우 식량자급률이 낮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식량·에너지 공급여건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외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 수요조절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 2〉 소비자물가 변동폭 (표준편차)

	한국	미국	영국	유럽	OECD
1990~1997	1.88	1.06	2.26	0.82	0.89
1998~2009	1.74	1.35	0.84	1.80	1.07

* 출처: OECD.stat DB.

〈표 3〉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변동폭 (표준편차)

	한국	미국	영국	유럽	OECD
1998~2009 식료품	3.49	1.89	3.20	2.50	1.65
에너지	10.03	13.62	6.79	5.96	8.40

* 출처: OECD.stat DB.

5)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물가의 하방경직성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 때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선진국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난다. 선진국 물가는 상승·하락기에 변동폭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물가는 상승기에 비해 하락기에 변동폭이 줄어드는 비대칭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표 4, 5) 주요 품목들의 가격 추이를 보면, 선진국은 상하방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22, 23)

이러한 물가의 하방경직성은 낮은 경쟁압력과 왜곡된 가격결정 구조 및 지대추구행위 등에 기인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기업으로 하여금 가격설정자(price setter)의 지위를 누리게 함으로써 가격 하락요인의 반응을 억제하고 소비자 잉여를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¹³⁾ 소비자의 감시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정보가 비대칭적인 것도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또한, 제약산업과 같이 시장 투명성이 낮고 지대추구가 가능한 시장구조 하에서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경쟁으로 하방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음성적 거래비용은 결국 가격으로 전가되어 모든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된다.

가격의 하방경직성은 소비자의 체감물가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외생적인 충격 요인에 대한 조정과정을 저해하여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다.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출감소폭이 확대되어 경기침체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가격조정이 신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정보공개 확대,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여건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13) 김승원·안희주(2004, 한은)는 시장집중도(허쉬만-허핀달지수)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생산자물가가 0.17%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표 4〉 소비자물가 변동폭(200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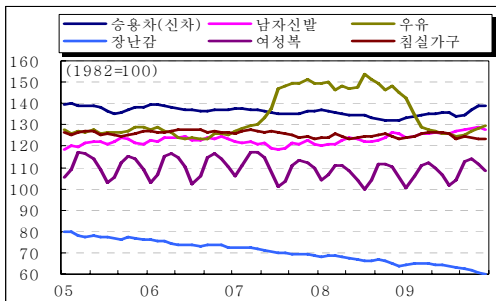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상승기	0.76	0.41	0.38	0.82
하락기	△0.56	△0.41	△0.35	△0.76

〈표 5〉 근원물가 변동폭(2000~2009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상승기	0.43	0.18	0.26	0.20
하락기	△0.31	△0.17	△0.21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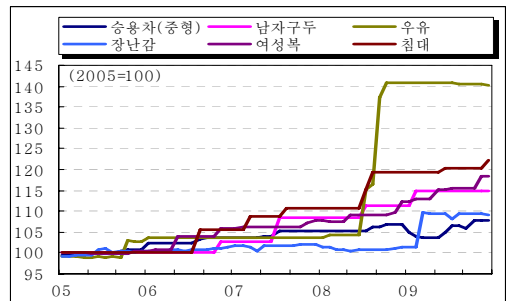
*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의 실제치와 장기추세치(HP filter) 간의 차이를 상승·하락기로 구분하여 평균한 값.
* 출처: OECD.stat DB 자료를 토대로 자체 산정.

〈그림 22〉 미국의 주요 품목 가격 동향



* 출처: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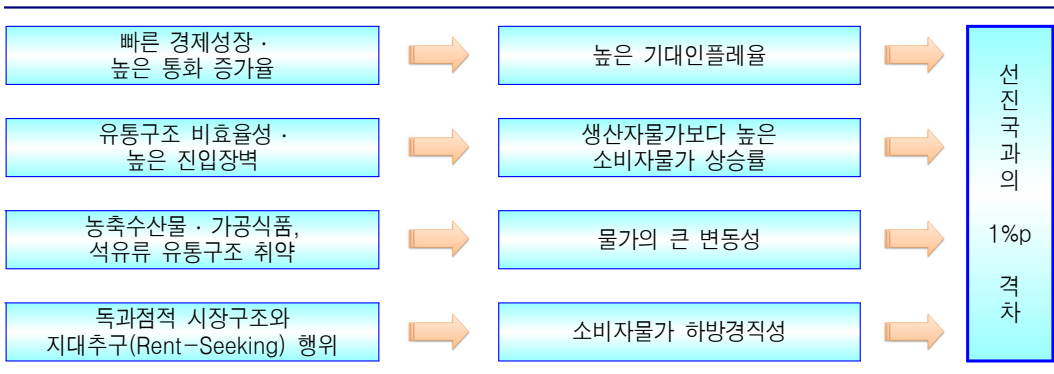
〈그림 23〉 한국의 주요 품목 가격 동향



* 출처: 통계청 KOSIS DB.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 요약



4.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1)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인플레이션의 해악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는 항상 경제

학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아 왔으며, 시대상황과 학파에 따라 인플레이의 원인과 정책대응수단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경제의 발전단계나 시장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물가상승률이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의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거시정책과, 개별 시장의 수급 안정과 경쟁여건 조성, 인플레이심리 관리 등을 통해 물가안정기반을 강화하는 미시대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거시정책은 통화·재정정책 등을 통해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경기와 고용 변동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시정책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유가상승, 수급불안 등 비용상승에 기인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경기 및 고용 위축을 야기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미시적 차원의 정부 역할은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져 왔다. 시장경쟁 및 가격의 수급조절기능이 미흡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관리하였으나 민간시장의 발달, 개방화 진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1990년대 이후에는 수급 안정, 규제 완화와 수입 확대 등 경쟁 촉진, 물가안정을 위해 민간주체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및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화하였다.¹⁴⁾ 다만,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시장들이 완전경쟁시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정보 비대칭성 완화,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하는 것은 물가안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 하겠다. 한편, 인플레이심리가 확산될 소지가 있는 경우 정부가 임금인상 억제, 공공요금 관리, 시장감시 등 수단을 통해 인플레이심리를 안정시키는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물가관리정책은 물가압력을 분산시키고 인플레이심리를 완화하여 “저물가”의 좋은 균형(cooperative equilibrium)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나, 사용방식에 따라서는 시장가격의 왜곡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⁵⁾

14) 과거 민간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가격의 시장수급 조절기능이 발휘되지 못한 경제개발단계에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최고가격 지정, 가격 사전승인제 등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였다. 이후 가격사전승인제는 1981.6월 가격동향사후감시제로 변경되었으나 사후적으로 정부로부터 원가를 검증받도록 되어 있어 실제 기업의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가격사전승인제와 큰 차이가 없었다. 1980년대 이후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물가관리정책은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서 시장 수급여건 개선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로 서서히 바뀌었다. 12년간 지속되었던 가격동향사후감시제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가격변경사후보고제로 변경되었다. 1994.2월에는 가격변경사후보고제까지 폐지됨으로써 공산품 가격결정은 완전자유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격자유화 추세에 따라 석유류 가격도 1997.1월부터 완전 자유화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통신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의료수가 등 공공성이 있는 경우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가격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15) 이준구·이창용(1997)은 전통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의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정부로서는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물가안정의지 표명 등을 통해 인플레이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으나 시장가격 왜곡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 최근 물가불안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

최근 국제유가·원자재가격 등 물가 불안요인이 예상보다 크고 당분간 지속될 소지가 있는 등 대내외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요인이 인플레이 심리 확산으로 연결될 경우 경제의 안정기조를 저해하고 서민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경제에 물가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충격에 맞추어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고 경제주체의 소비나 투자행태가 변화해야 경제에 비효율이 생기지 않으며, 그래야 충격에 대한 경제의 내성이 강해지고 또 다른 불안요인이 생겨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물가충격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경제주체가 과민반응하고 인플레이 심리가 흔들릴 경우 경제가 ‘고물가’의 나쁜 균형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¹⁶⁾¹⁷⁾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최근의 물가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13일 “서민물가안정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상반기 물가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는 한편, 일시적 불안요인 때문에 인플레이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거시 및 미시대책을 포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기·고용·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한편, 미시적으로는 수급안정, 관세인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단기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대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등으로 물가여건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시계 하에 해외식량기지 건설 등 농축수산물 분야의 미래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등 고유가 상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3) 거시정책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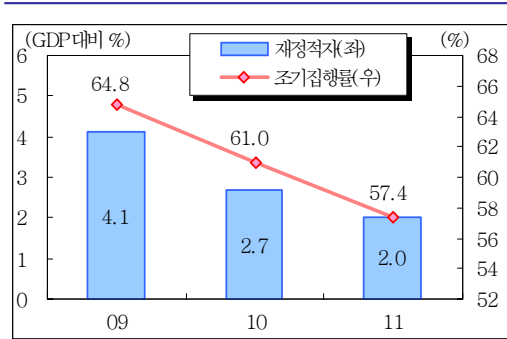
거시정책은 최근 물가리스크가 커진 점, 경기·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다. 공급부문의 물가충격이 큰 상황이지만 수요측면의 압력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거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두고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글로벌 위기 극복 과정에서 2009년중 GDP의 4.1%(결산기준)로 확대된 재정적자를 2010년 2.7%(예산기준), 2011년 2.0%(예산기준)로 빠른 속도로 줄이고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도 2010년 61%에서 2011년

16) 박형근·박정민(2007)은 국제유가의 물가 파급효과를 (i)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직접효과, (ii)석유제품을 원료·에너지로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격의 상승(원가상승 반영), (iii)지속적인 석유제품 가격 상승 예상 등을 바탕으로 한 원가상승 이상의 석유 관련 제품 가격 상승, (iv)인플레이 기대심리에 따른 여타 제품·서비스 가격 동반 상승으로 구분하고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i), (ii)의 파급효과는 물가충격에 대한 조정과정으로 불가피하나, (iii), (iv)의 파급효과는 인플레이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7) 정운찬·김영식(2010)은 경제 내에 여러 개의 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기업의 비관적 예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효용수준이 낮은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이 실현되는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경제주체의 기대를 낙관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나쁜 균형에서 좋은 균형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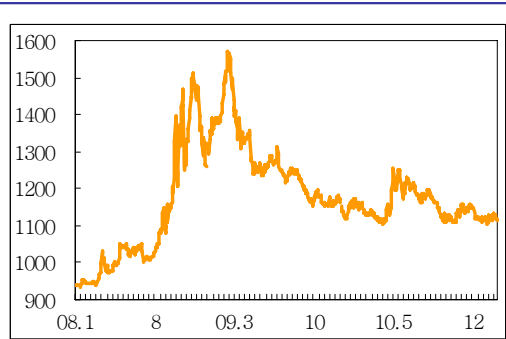
57%로 축소하는 등 재정을 긴축기조로 운영하고 있다.(그림 24) 통화정책의 경우, 지난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등 작년 하반기 이후 정책금리가 세 차례 인상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시장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5)

〈그림 24〉 재정적자 및 조기집행률



* 출처: 기획재정부.

〈그림 25〉 원/달러 환율



* 출처: 한국은행 ECOS DB.

현재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향후 유가 등 진전추이를 보아가며 현 거시정책기조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물가충격의 지속성 여부, 고용과 금융시장 상황 등 여타 정책여건, 공급부문 충격에 대한 총수요정책의 효과성과 대응 강도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4) 미시정책 대응

가.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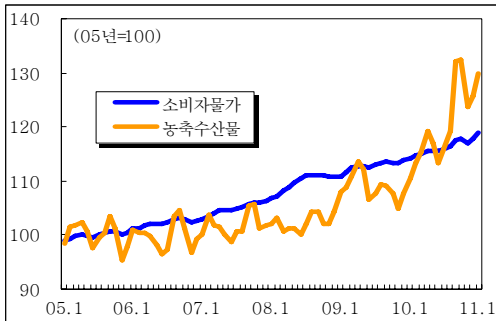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가격은 농산물 작황이 정상화되는 2/4분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파 등의 여파로 봄작물이 출하되는 3~4월까지의 공급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는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할당관세 인하 등을 통해 수입을 확대 시킴으로써 수급안정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2010년 이전에는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가격 변동성은 높은 모습을 나타내 왔다.¹⁸⁾(그림 26) 이는 농축수산물 수요가 가격변동에 비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기상여건, 재배면적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그림 27) 따라서 농축수산물의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격

18) 지난 10년간 일부 채소류의 공급과잉으로 매입 폐기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의 경우 대규모 공급부족으로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야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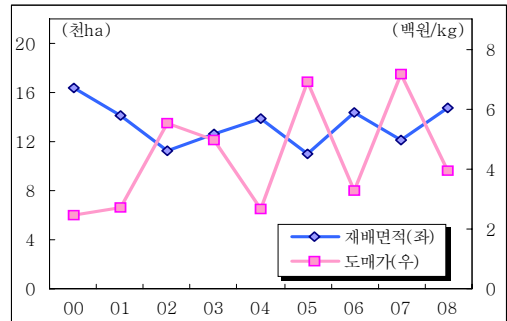
안정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내더라도 기초생활품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불안할 경우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의 수급 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과제이다.

〈그림 26〉 소비자물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 출처: 통계청 KOSIS DB.

〈그림 27〉 가을배추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 출처: 통계청 KOSIS DB, 농수산물 유통공사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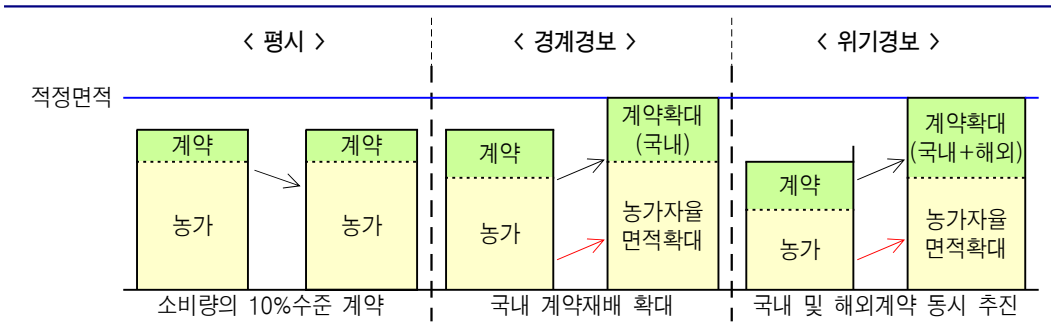
특히, UN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하는 세계 식품가격지수가 급년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식료품 가격의 불안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수산물 공급을 저해하는 기상악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수면 상승, 도시화 등으로 경작지가 축소되고 토양 유기물 함량이 줄어들면서 농수산물의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다.¹⁹⁾ 이러한 공급애로 요인과 함께 막대한 인구를 보유한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증가,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까지 가세할 경우 식량수급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 관측제도를 개선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여 공급조절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측결과 공급부족 전망시 추가계약을 통해 공급량을 추가 확보해 나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²⁰⁾(그림 28)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 공급의 구조적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원활한 곡물 수입을 위해 급년 상반기중 해외 곡물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해외 농업개발 생산기지 건설, 공공비축 확대,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9) 최근 기상악화 현상으로는 인도 서부지역의 폭우, 중국의 폭설·홍수, 미국·아르헨티나의 가뭄, 호주의 홍수·사이클론 등을 들 수 있다.

20) 농업관측 결과 ‘경계경보’ 발령시 부족면적의 50%를 국내에서 추가 계약하며, ‘위기경보’ 발령시 부족면적의 50%를 국내 및 해외에서 추가 계약하되, 나머지 50%는 관측결과 홍보를 통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그림 28)

〈그림 28〉 공급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제도 개선



나. 공산품 등 경쟁 촉진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그간의 경쟁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입제한 및 관세·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경쟁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수입경로의 다양성 부족 등은 수입을 통한 경쟁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관세율은 평균 12.2%로 미국(3.5%)·EU(5.6%)·일본(5.4%)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6.1%)·중국(9.6%)보다도 높은 실정이다.²¹⁾ 시장경쟁이 원활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생산자간 경쟁여건 조성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 최근 가격·품질 정보에 대한 공개가 점차 확대되면서 소비자 선택에 의한 가격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점차 마련되고 있으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경쟁확산을 위해 정부는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가격정보 공개시스템(T-price)을 통해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정보 제공품목을 늘리는 한편, 스마트폰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실시간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통해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현행 관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세율 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중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담합, 편승인상, 출고지연 등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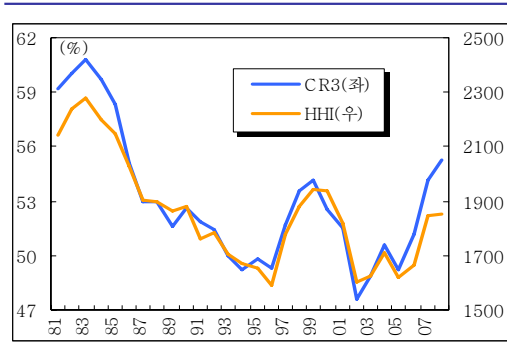
다. 시장구조 개선

우리나라는 작은 시장규모 등으로 소수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적 구조 형성이 선진국에

21) 우리나라의 2009년 실효관세율은 2.2%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1% 미만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보다 높다. 실효관세율은 관세로 인한 실질적인 국내산업 보호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완성재 수입에 대한 관세에서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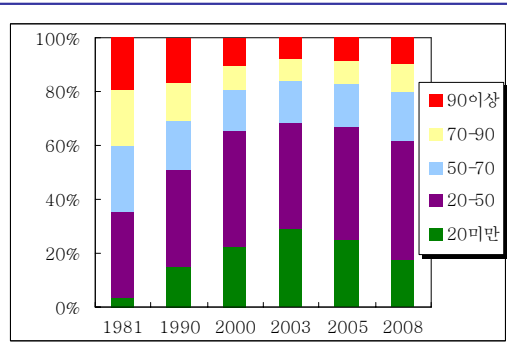
비해 용이한 편이며, 외환위기 이후 산업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29) 2002년 이후 전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상승세를 시현하는 가운데, 독과점형 산업($CR_3 > 90\%$)이 증가하고 경쟁형 산업($CR_3 < 20\%$)이 감소하고 있다.²²⁾(그림 30) 2005년 46건이었던 담합 조치건수가 2009년 6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독과점 심화를 반증하고 있다.

〈그림 29〉 전 산업의 시장집중도 추이



* 출처: 공정위 시장구조 통계.

〈그림 30〉 CR3 지수 분포 추이



* 출처: 공정위 시장구조 통계.

특히, 정유, 통신산업 등은 서민생활과 밀접하지만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어 있다. 일례로 정유 4사와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표7, 8) 석유제품과 통신서비스는 가계소비(2010년)의 5.1%, 6.1%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서민생활 밀접 품목이며, 최근 국제유가 강세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정유사 시장점유율 (%)

	2007	2008	2009	2010
SK	39.1	38.5	38.9	37.8
GS	32.2	32.6	32.0	31.7
쌍용	12.7	13.1	13.2	13.8
현대	15.3	15.1	15.3	16.1

* 출처: 석유협회.

〈표 8〉 이동통신사 시장점유율 (%)

	2007	2008	2009	2010
SKT	50.5	50.5	50.6	50.6
KT	31.5	31.5	31.3	31.6
LGT	18.0	18.0	18.1	17.8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2) 시장집중도(CR_3)는 상위 3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합을 의미하며($CR_k = \sum_{i=1}^k S_i$), 허쉬만-허핀달지수(HHI)는 한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치를 합한 수치이다($HHI = \sum_{i=1}^N S_i^2$).

정유업계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유가 하락시에는 천천히 떨어지는(rockets and feathers)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²³⁾ 또한, 그간 폴 사인제 폐지(2008.9월), 수평거래 허용(2009.5월) 등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유사-주유소간 거래단계에서 경쟁압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²⁴⁾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관계기관,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석유가격 T/F’를 구성하고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의 합리성, 경쟁수준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3월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유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조합한 단계별 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업계와 관련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도가 시장경쟁 및 요금 인하를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통신 3사가 매출액의 20%가 넘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지속하고 있어 현행 요금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²⁵⁾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등을 통해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요금 T/F’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방식 및 통신요금 결정구조 재검토 등 통신비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 유통구조 개선

유통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성 및 복잡한 유통구조 등으로 실질적 성장이 제약되면서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표 9) 생산단계에서 독과점 구조로 출고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고, 수입단계에서 독점수입계약 등으로 수입단가가 높게 형성되며, 유통단계에서 높은 중소매업체 비중, 다단계 구조 등으로 낮은 생산성이 지속되는 등 유통단계별 비효율성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농수산물물은 복잡하고 다단계화된 유통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유통비용 상승, 가격변동성 확대 등을 초래하고 있다.(그림31) 석유제품의 경우 2011.1월 현재 4대 정유사 풀이 전체의 94%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가폴 주유소들은 6%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수직계열화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고 있을 소지가

23) “에너지가격, 에너지소비 및 산업생산활동에 대한 석유가격 자유화의 영향 분석”(문영석, 2004), “자동차 연료의 소매가격 및 소매마진액 변동요인분석”(이달석, 2005), “석유제품의 가격비대칭성에 대한 연구”(김진형, 2007) 등.

24) 폴 사인제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한 제도로서 1992.4월 도입되었으나 경쟁저해 소지에 따라 2008.9월 폐지되어 각 주유소는 혼합판매 사실만 표시하면 다른 상표의 정유사 제품을 팔거나 여러 정유사 제품을 섞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25) 우리나라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매출액 대비 26.5%로 일본(20.9%), 영국(16.9%), 프랑스(13.5%), 미국(13.0%), 호주(10.5%), 독일(8.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Strategy Analytic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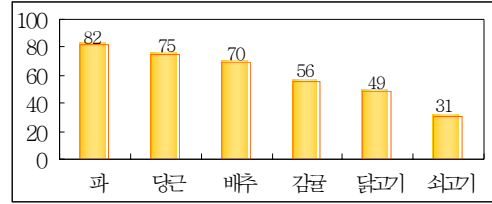
있다.

〈표 9〉 2010년 도소매업(유통산업) 비중 (%)

	GDP 비중	취업자 비중
농림어업	2.3	6.6
제조업	27.7	16.9
건설업	5.7	7.4
도소매업	7.6	15.0
음식숙박업	2.1	7.9

* 출처: 통계청 KOSIS DB, 한은 ECOS DB.

〈그림 31〉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 (%)



* 출처: 2009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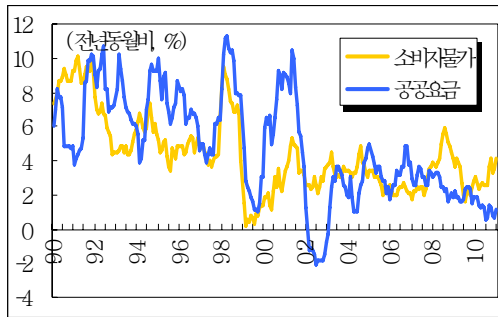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상반기중 산지유통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계약재 배물량을 전통시장·가공업체 등과의 직거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등 직거래 계약재배 물량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지 인근의 직거래 장터를 확충하는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직거래 방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²⁶⁾ 기타 공산품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중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생활용품, 의복, 가전제품별로 T/F를 구성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신유통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마. 공공요금 안정

공공서비스의 경우 자연독점의 성격 등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독점적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어 경쟁여건 조성에 한계가 있다. 공공요금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2)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변동성이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즉각 요금에 반영하는 국가들과 달리 원가를 사후적으로 보상해 주는 요금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33) 그러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추후에 요금인상을 통해 회수할 수 있어 공기업의 원가절감 유인이 결여될 수 있고, 인상요인 누적시 일시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경영여건이 열악하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 왔던 만큼 안정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표 10)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유인체계를 적절히 설계(mechanism design)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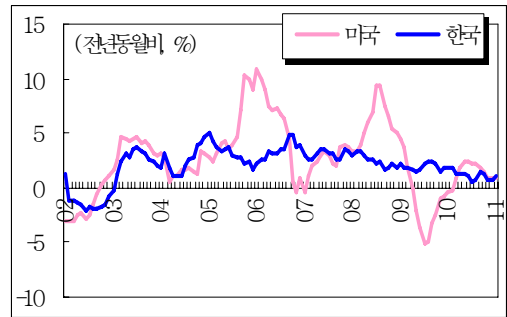
26) 기존 주유소에 비해 셀프 주유소의 휘발유는 리터당 29원, 자가용 주유소는 33원, 마트 주유소는 76원 정도 가격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소비자물가 및 공공요금 추이



* 출처: 통계청 KOSIS DB.

〈그림 33〉 한국 및 미국의 공공요금 추이



* 출처: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DB.

〈표 10〉 공공요금 상승률 추이 (전년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공요금	7.4	△1.3	2.5	2.5	3.2	3.5	3.1	2.4	1.9	1.2
중앙	0.2	△1.8	△2.6	0.0	△0.4	1.5	1.1	1.2	0.7	△0.2
지방	10.9	△0.1	7.6	4.7	6.0	6.9	5.7	4.0	3.2	2.1

* 출처: 통계청 KOSIS DB.

최근 물가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견지를 견지하되, 향후 인상요인이 일시에 조정되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공공요금을 지자체별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간 경쟁 및 책임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공공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년도 위주의 원가보상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협의제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²⁷⁾ 또한, 선진국의 경우 별도 설치된 독립 규제기관에서 산업규제, 물가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을 조정하고 있는 바, 향후 공공요금 결정을 어떠한 체계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²⁸⁾

5. 맺음말

최근 한파, 구제역, 국제유가 등 물가충격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한 가운데 불안요인이 당분간

27) 중기요금협의제는 중장기 경영효율화 계획을 토대로 요금수준을 설정하고, 추가적 원가절감시 공기업의 이윤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28) 미국은 각 주별로 PUC(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공공요금을 조정하고 있고, 영국은 전기·가스, 상하수도, 철도, 통신 등 각 산업별 규제기관이 공공요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이 전기·가스·통신 등을 규제하고 있다.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등 대내외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의 물가불안은 공급측면의 요인에 주로 기인되었으나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물가구조를 보면 시장 경쟁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유통구조가 취약하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크게 나타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물가여건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가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물가불안의 원인과 성격 및 전망, 활용가능한 정책수단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물가상황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틀 속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물가불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 1.13일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물가안정기반 강화와 인플레이 심리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물가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는 한편,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수급 안정, 경쟁 촉진, 독과점시장 및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안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미시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물가충격에 대한 경제의 조정과정에서 경제주체가 과민 반응하여 인플레이 심리가 확산될 경우 경제가 “고물가”의 나쁜 균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다. 인플레이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신뢰를 축적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시장 왜곡을 야기할 소지를 최소화해야 하며, 아울러 민간이 유가 등 상대가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 등 행태변화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과 관련하여, 독과점 등 시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의 정부의 역할,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개입의 수준, 시장기제에 따른 단기적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 가능성에 대한 대응 여부 및 방식, 공공요금 결정방식 등 앞으로 연구하고 논의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집중도 조사 및 독과점 고착산업 분석 결과,” 2010.
 기획재정부,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 2010. 9.
 ———,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2011. 1.
 ———, “최근 물가동향 및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계획,” 2011. 3.
 김승원·안희주, “시장구조와 물가·생산간의 관계 분석,” 한국은행, 2004.
 김정현·이동원, “우리나라 물가변동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2004.
 박형근·박정민, “인플레이션 연구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한국은행, 2007.
 산업연구원, “유통산업 구조변화와 업체별 핵심이슈,” 2006.

- 윤종원, “물가안정을 위해 소는 누가 키우나,” 중앙일보 비즈칼럼, 2011. 2. 25.
- 이준구 · 이창용, “경제학 원론,” 1997.
- 재정경제부, “국민생활편람,” 2001.
- 정운찬 · 김영식, “거시경제론,” 2010.
- 지식경제부, “우리나라 생산성 국제비교 분석 결과,” 2009.
- Alfaro L., “Inflation, Openness, and Exchange-Rate Regimes: The Quest for Short-Term Commit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005.
- Borio C. and A. Filardo, “Globalization and Inflation: New Cross-Country Evidence on the Global Determinants of Domestic Inflation,” BIS Working Paper, 2007.
- Campillo M. and J. Miron, “Why Does Inflation Differ Across Countries,” NBER Working Paper, 1996.
- Castelnuovo E., “Domestic and Global Determinants of the U.S. Inflation Expectations,” Macro Fanno Working Paper, 2007.
- Feyzioglu T. and L. Willard, “Does Inflation in China Affec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MF Working Paper, 2006.
- Kamin S., M. Marazzi and J. Schindler, “Is China Exporting Deflation?,” FRB,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 2004.
- Sachsida A., F. Carneiro and P. Loureiro, “Does Greater Trade Openness Reduce Inflation? Further Evidence Using Panel Data Techniques,” *Economics Letter*, 2003.